특별기고

지역 언론 외면하는 포털, 상생길 찾아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역 언론이 위기다.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올 4월에 여야 의원 13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일명 '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요지는 국민 대다수가 매일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의 첫 화면에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역 언론 기사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가 중앙 언론에 집중돼 있는 불균형과 차별을 개선해야 지역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의 육성 필요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도 지역 언론의 뉴스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등 포털을 통해 많은 독자가 읽고 있다. 특히 지역을 특화한 지역 언론의 기사들, 예를 들어 지역 맛집이나 추천 여행지 등에 대한 뉴스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나 콘텐츠는 중앙 언론보다는 지역 언론이 더 경쟁력이 있다.

현재 뉴스 소비의 주류는 포털이다. 가장 많은 국민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종이 신문을 보는 데는 하루 평균 5분을 사용한 반면, 모바일 등을 통한 뉴스 소비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포털에서 지역 언론의 기사나 뉴스를 쉽고 찾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이는 뉴스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포털에 많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포털사는 지역 언론의 뉴스를 노출해 달라는 지역 언론사들의 요구에 대해 기술적 문제나 시장성 문제 등을 들어 외면해 왔다.

우리 국민 90%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메인 화면은 뉴스로 시작된다. 이러한 뉴스 서비스를 통해 포털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포털사들은 전체 지역 언론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도 지역 뉴스에 대해선 1원도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역시 전체로 보면 한 지역에 불과하다. 하지만 포털 메인 화면에는 지역 언론의 뉴스가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중앙 언론 기사 일색이다. 이는 중앙 언론과 지방 언론 간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에 대해 외면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작 국민들 각각의 생활과 삶에 중요한 지역 의제는 축소되고, 생활 정치와 지방 자치의 핵심 기반은 붕괴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은 포털이 지역 언론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뉴스가 뉴스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 뉴스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를 통해 지역 언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포털이나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

지금은 포털 시대이다. 포털이 공론장이고 미디어이다. 포털이라는 이 인터넷 공간에는 중앙과 지방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포털에는 차별이 심하다. 이는 뉴스 공급자인 포털에도, 뉴스 생산자인 지역 언론에도, 뉴스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상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포털-지역 언론-국민'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자.

종교칼럼

한반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조진무
피아골피정집 관장 신부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서로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게 되고, 한반도에는 핵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65년간 지속된 '정전 협정' 상태를 정치적이지만 동시에 실효성 있는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산가족의 재회와 남북간 경제 협력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이렇게 대부분 국민들의 희망 하나하나를 언급하기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희망은 최근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고 유엔 총회의 모습들을 보면 더욱 더 낙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작금의 모습들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공감과 함께,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겠지만, 그 희망들이 하나씩 실제로 잘 풀어가면서 실현된다면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제자들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도교회의 신앙인들도 많은 죄와 잘못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 안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란 사랑, 진리, 정의와 함께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가치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고, 평화는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정의의 실현을 통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하느님 나라의 가치들이 서로 연관되면서 함께 실현되어 갈 때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믿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소망과도 일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호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경과 민족과 인종, 종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바로 평화라는 점은 자명한 것이기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마태오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이른바 '산상 설교'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바라보자면, 지금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발걸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계층에게만 이롭고 득을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게 이롭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전체주의적 체제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요된' 평화는 더더욱 진정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평화란 곧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인 계산이나 국가간의 군사적 또는 경제적 힘의 균형에 의해 규정되고 실현되는 형국을 뛰어 넘어서,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교에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나 구원, 사랑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 안에서 아직 충만하게 완성되지 않아 아직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 단계 한 과정을 거쳐나갈 때마다 우리는 늘 되물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책임 맡은 사람들이나 국가에게 그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그 평화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나 목표가 옳은 것인지 질문하며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가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로 실현되기 위하여!

기 고

어른들의 책임과 광주형 일자리

조선기
한국폴리텍Ⅴ대학 학장

멀리서 온 친척들, 친구들과 인사만 나눈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금방 지나가 버린 기분이다. 간만에 고향에 모인 가족들과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자니, 올해 추석에도 어김없이 눈에 띄는 뉴스 한 꼭지가 있었다. 언제부턴가 서울역과 버스터미널의 들뜬 귀성객들 인터뷰가 끝나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꼭지다.

귀성객들을 만난 카메라는 학교 도서관과 노량진을 찾는다. 학교 도서관에, 노량진에 남은 청년들의 인터뷰 내용은 매년 돌아오는 명절마다 한결같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다 보니 부모님께 죄송하고 친척들 볼 면목이 없다는 것. 명절이지만 하루라도 더 공부해서 부모님께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다.

취업이 늦어져 미안한 마음에 고향에 가지 않고 공부한다는 청년들을 보니 마음이 짠했다. 특히 얼마 전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인지, 화면 속 청년들이 우리 지역 아이들처럼 느껴져 더욱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받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일자리는 청년들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대체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의 일자리 사업들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답답함만 더해진다. 특히 지역 사회가 많은 기대를 품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현대자동차 투자 유치 사업이 영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현대 자동차 투자 유치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자로서 완성차 공장 법인을 우리 지역에 새로 만들고, 이 공장은 현대차가 위탁한 물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시에 따르면 이 공장은 현대차가 새로 개발한 경형 SUV를 생산할 예정이고, 약 1000여 명의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6월 현대자동차의 투자 의향서가 제출됐을 때만 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날이 선선해진 지금까지도 투자 협약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에 노동계가 참여하는 문제, 새로 만들어지는 공장의 임금 수준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 사회와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광주시와 노동계의 대의는 우리 지역 사회 청년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하나일 것이다. 대의가 하나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상황이 꼬여버린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실험이 바로 현대차 투자 유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틀 속에서 시와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서로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파트너다. 같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긍정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노동계에 사업에 대해 성심껏 설명하고, 노동계도 불참 선언이라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어쨌든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오해가 있어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대의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배제와 이탈이 아닌 대화와 연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어른들에겐 지역에 새로운 공장 하나 들어선다는 의미일지 모르지만, 청년들에게는 1000여 개의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일이다.

전국이 주목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광주시와 시민들, 노동계 그리고 현대차가 함께 성공시킨다면 고사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나아가 우리 지역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추석은 지나갔지만, 다시 돌아온다. 이번 추석에 도서관에 남았던 청년들이 내년 설에는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안고서 고향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社 說

도시철도 2호선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느닷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공론화 의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뒤로 가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건설을 전제로 그 방식을 논의하던 차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건설 여부를 묻는 것은 또다시 소모성 논쟁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했다. 우선 시민 2500명을 표본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발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11월 10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광주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16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시장은 공론화는 광주에서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10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설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민간공원 특례 사업 등 광주시 현안 사업 해결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이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로 내세운 것도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광주시 현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일 터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건설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에 맡긴 것을 두고 혹시라도 건설 백지화를 염두에 둔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40여 일 후면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끝내기로 했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두환 재판 연기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연기될 판이다. 벌써 세 번째다.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나 연기 신청을 낸 데 이어, 급기야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5·18항쟁 당시 헬기 사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재판 중인 전두환 씨 측은 지난 21일 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씨에 대한 재판은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이번 공판은 애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씨 측이 '고령으로 광주에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낸 데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첫 공판이 8월 27일로 늘어졌다. 재판 이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 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8월 27일 출두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전 씨가 공식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10월 1일을 두 번째 공판 기일로 잡은 바 있다.

고령이니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편의를 봐 달라고 했다가 서류 준비 시간을 요청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 핑계를 대더니 이제는 재판의 공평 유지를 이유로 들며 법원 관할 이전까지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재판정에 서지 않으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만약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지는데 공판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씨는 올해 안에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 씨는 그동안 회고록 등을 통해 5·18에 대해 당당한(?) 입장을 보였던 만큼 더 이상 재판을 회피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피해자다움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으려는 여성들의 절규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왜 범죄 현장에서 적극 저항하지 않았는지, 주위에 알리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등을 일반적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목소리다.

여성들은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문제 삼는다. 재판부가 사건 발생 전후에 김지은 씨가 보인 행동이나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한 '피해자다움'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식당을 찾으려고 애쓴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검찰은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최근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지적했다.

언젠가 한 세미나에서 어느 여성 강사의 고백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술자리에서 상사에게 그런 일을 당한 후 밤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자신을 경험했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다음 날 가해자가 '별 일 없었지'라고 묻자 '저도 취했는걸요. 별일 없었어요'라며 태연히 웃으면서 '미친X처럼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사례를 재판정에 올린다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이 강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식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말도 머리에서 지워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상처는 난치 질환이나 불치병이 아니라 얼마든지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들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애써 찾아 듣고 깊이 새겨야 할 것 같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 번도 여성의 처지에 놓인 적 없는 남성들이 여성의 짓눌린 삶과 상처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설 수 있으려면 말이다.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